

“행정통합 후 광역단위 SOC 사업·공공투자 확대돼야”

광주전남 통합 건설·안전·교통·노동분야 시민공청회
초광역 교통체계도 주문…고용 안정화 등 통합 전략도

전남광주행정통합 이후 광역 단위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공공투자가 확대가 제안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른 최근 광주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건설·안전·교통·노동 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추진배경과 경과,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며 “통합은 일 자리이다. 행정구역을 단순히 합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삶의 반경을 넓히는 일이고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대화·타협·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습니다’

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격려했다”며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분야별로 통합 이후 변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건설 분야 관계자들은 행정통합을 계기로 광역 단위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공공투자가 확대돼 지역 건설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주와 전남을 잇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함께 행정 경계를 넘는 환승 체계 통합, 요금체계 개선 등을 시민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건설·안전·교통·노동 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시

안전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등 안전 기준 강화, 노동 분야에서는 통합 이후 산업 확장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 고용 안정성을 제도적으

로 담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 시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특별법 제정 과정 등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 뒤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이 뒤따를 것인 만큼 건설·안전·교통·노동 분야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건설

·안전·교통·노동 분야 의견을 행정통합 정책 설계와 특별법 보완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전남도, 24시간 총력 대응

전남도는 최근 건조한 기상 여건과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둔다.

대책본부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체제로 운영되며, 산불 예방은 물론 발생 시 초동 진화와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둔다.

최근에는 산림과 인접한 주택이나 시설에서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와 작업장 인화물질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가 산불로 확산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소각 중심 예방 대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와 태양광 발전시설 등 건축물과 시설물 관리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등부권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을방송과 가두방송을 통해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산불 감시 사각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감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광주, 어린이집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인상

보육료 월 8000원·필요경비 연 10만8000원 의결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분 등 전액 지방비 지원

광주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보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인상분 전액은 지방비로 지원해 학부모의 실제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하고, 지난달 30일 결장·고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8000원 오르고, 필요경비는 연 10만 8000원 인상된다. 시행은 오는 3월 1일부터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해마다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결정하고 있다.

정부지원시설은 정부가 정한 보육료를 따르고, 민간시설은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 보육료 수납한

도액은 지난해 대비 각각 8000원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민간의 3세반 38만5000), 4~5세반 37만3000원이며, 가정 3세반 40만1000), 4~5세반 38만9000원이 적용된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난과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시는 이번 보육료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없애기 위해 무상보육 실현 차원에서 인상된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한다.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중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10만8000원 인상하고, 나머지 항목은 동결했다.

시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7월 정부의 단계별

무상보육 확대 정책 시행(2025년 5세→2026년 4세→2027년 3세, 7만원)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소급 지원했으며, 올해는 4세까지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된 ‘2026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총 4개 분야, 51개 보육사업(4465억원, 전년 대비 71억원 증액)에 대한 ‘2026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달라지는 보육정책은 △부모부담 필요경비 확대(4세 1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추가지원 확대(3세 5만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760원→930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및 아침돌봄수당 신설 △영유아 발달 컨설팅 대상 확대(3세→2세 추가)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등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 농업인단체연합회 80명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선언

광주·전남 농업관련단체인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상임대표 최원섭)는 지난달 30일 전남농업기술원 세미나실에서 ‘행정통합지지 농업인단체 선언문’을 발표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촌지도자전남도연합회(최원섭 회장), (사)한국전문농업인협회광주전남도지회(김동근 회장), 대한양계협회전남도지회(김희실 회장) 등 전남도 15개 농업인단체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는 행정통합 지지 선언문을 통해 △농정 수립 전반에 농업인 단체 의견 반영 △농업 정책을 전담하는 농정조직과 도시 중심 행정의 균형 운영 △농업 예산의 안정



적 유지·확대를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 정책이 강화되기를 강조했다.

최원섭 상임대표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이 중심이 되는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전남농업인들은 행정통합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적극 협력하되 그 과정 전반에 농업인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3-4층 [우/61234] · T.062)370-7000 · F.062)370-7005

광남일보